

# 건설사 '퇴출폭풍' 예고

## 부실·불법 실태조사 업체 311개 선정 도, 적발업체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

올 연말 도내지역 부적격 건설사들의 퇴출 바람이 거세게 몰아칠 전망이다.

15일 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도내 676개 종합건설업체 가운데 311개를 불법·부실 실태조사 대상업체로 선정, 해당 업체들에게 자본금 등 건설업등록기준과 관련된 기본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토해양부가 서류상 회사인 '페이퍼컴퍼니'를 퇴출시키고 불법을 행한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담아 지자체에 위임한 것으로 도는 일선 시군과 공동으로 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은 물론 일괄하도급, 재하도급 등 위반 여부까지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는 조사 주체가 기존의 건설단체가 아닌 도와 지

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부실업체 퇴출 바람이 더욱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최근 도 관계자 4명을 주축으로 대한건설협회 도회 2명, 한국건설기술인협회 1명 등 7명으로 실태 조사반을 편성, 이달 말까지 불법·부실업체의 기본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뒤 현장 실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사반은 올 연말까지 현장실사를 통해 불법·부실업체를 적발하게 되면 지자체별로 명단을 통보,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올해 도내지역 종합건설업 등록 업체 중 절반 가량이 불법·부실업체 대상으로 선정되고 사상 유례없이 엄격한 적발장대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의 불안

감도 커지고 있다. 지역 건설업체들은 실태조사가 이뤄지면 올해 퇴출대상 규모가 사상 최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자칫 영세업체까지 행정처분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도내 A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건설경기 침체로 자산유동화가 어려운 중소 영세업체들에게 불똥이 튀지않을까 우려된다"며 "시공능력이 없는 유명회사들이 공사를 수주해 일괄 하도급을 주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하지만 정확한 실사와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선의의 피해를 보는 업체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지자체가 주관하고 건설단체는 지원역할만 맡아,퇴출대상을 엄격한 잣대로 선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실사에서 재무재표, 실질자산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하는데다 업체의 청문 기회까지 부여하면 행정처분은 내년초쯤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현철 lawtopia@kado.net